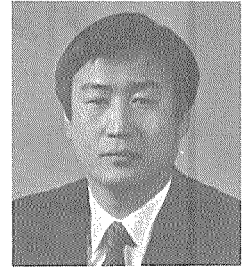


# 한국 전자정보산업의 오늘과 장래



이 회 범  
상공자원부 전자정보공업국장

## 1. 서론—용어의 혼란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은 산업의 정의와 분류체계를 바꾸어 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산업이라면 TV와 VTR 등 영상기기와 오디오 제품인 음향기기를 포함한 가전산업에서 출발하여 컴퓨터와 유·무선 통신기기에 이르는 산업용 전자로 발전하여 왔고 이를 구성하는 부품산업으로 분류되어 왔다.

그러나 부품산업으로 분류되어 온 반도체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개발되면서 그 자체가 컴퓨터를 이루게 되었고 능동소자와 수동소자로 분류되어 온 부품산업은 집적회로가 나오면서 구분의 실익이 반감되었다. 또한, 반도체기술의 발전은 기계산업에 적용되어 메카트로닉스(Mechatronics)란 용어를 만들어 내었고 최근 들어서는 멀티미디어가 상용화 되면서 컴퓨터를 기점으로 하여 통신과 가전산업, 영화, 출판, 방송이 믹스되어 어디까지가 전자산업인지 구분하기가 모호하게 되었다.

예컨대 로봇과 기계나 전자나

에 대한 대답은 로봇의 머리부분 또는 팔·다리 어느 부분을 말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항공기 산업도 실제로 50% 이상이 전자장비로 구성되어 있다고 자동 Navigation시스템이 완료되면 자동차산업도 20% 이상이 전자장비로 구성될 것이다.

첨단산업이나 고부가가치산업이란 개념도 마찬가지이다. OECD의 국제 표준산업분류(ISIC)에 따르면 첨단산업으로 의약품, 사무용기기, 전기기기, 전자부품, 항공기 및 측정장비를 들고 있으나 미 상무성의 표준산업분류(ISI)는 유도미사일과 우주선 통신장비와 전자부품, 항공기 및 부품, 사무·회계기계, 의약품, 유기화학제품, 플라스틱 물질, 합성레진, 고무 및 섬유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마디로 공장과 가정의 자동화와 인류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향상시킬 전자산업은 어떤 산업에도 응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는 생활산업이자 생산적산업이며 첨단산업으로서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최근들어 정보·통신이란 용어가 여러분야에서 사용

되고 있으나 그것 또한 구체적인 어디까지를 포함하고 무엇을 제외하느냐에 대한 대답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 2. 전자·정보산업의 어제와 오늘

편의상 전자·정보산업을 전통적인 산업용전자와 가전제품 및 전자부품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우리나라에서 산업으로서 전자공업이 시작된것은 1960년대 경제개발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1959년 처음으로 진공관식 라디오가 생산되어 1962년 첫 수출된 이래 70년대에는 생산에서 연평균 48.5%, 수출은 연평균 37.9% 증가하는 양적 성장기를 이루었으며 80년대에는 생산구조가 가정용기기 중심에서 컴퓨터 및 반도체 산업으로 고도화되어 왔다. 즉, 1980년 전자제품 총수출 20억불 중 산업용 8%, 가정용 52%, 부품 40%의 구조는 92년말에는 10배가 증가한 총 206억불의 수출 가운데 산업용이 22%, 가정용 28%, 부품 50%로 개편되었다.

전자산업은 양적·질적 성장에

협업이 우리나라 최대 수출산업으로 발전되었는데 전체 제조업의 9.3%인 45만 7,000명을 고용하고 있으면서 87년에 수출 100억불을 돌파한데 이어 91년에 200억불을 넘어 섰으며 금년말에는 전체수출의 29%인 240억불 수준에 이르게 되고, 반도체는 모듈제품을 포함하면 83억불이 되어 단일품목으로는 최대 수출 품목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전자전기제품 수출이 경공업전체의 수출을 2억 2,000만불이나 앞서게 되어 전체수출의 견인차임을 다시한번 입증하였다.

지역별로도 미국시장의 의존율이 30% 수준으로 점차 감소되고 있고 아세안 국가에의 수출이 전체 전자제품 수출의 16%로 급증하고 있으며, 엔고에 따라 대일 지역 수출도 점차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중국 수출은 전체 전자제품 수출의 1%에 불과하나 매년 2배 이상씩의 성장을 보이고 있어 투자 진출의 확대와 함께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전자제품 생산 중에서 우리제품의 비중은 1980년 1.1%에서 1990년에는 4.8%로 제고 되었고, 특히 가정용기기는 15.6%, 반도체 DRAM분야는 세계 수요의 24.3%를 공급함으로써 세계적인 생산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60억불의 가전기기를 수출하여 세계 제2위 공급국가의 위치에 있다해도 일본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기술적으로도 TV, VCR 등 전통적 상품에 치중하고 있으므로 기술개발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무궁한 시장이 있다고 할것이다.

### 3. 극복해야할 과제들

전자산업은 첨단산업으로서 인류의 장래를 개척해 가고 있다는 자부심 못지않게 극복해야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첫째는 기술개발 투자에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비해 제품수명(life cycle)이 짧아 투자리스크가 많고, 그 위험을 분산할 장치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4M DRAM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6억불이 소요되고 16M DRAM의 경우 9억불이 필요하나 4~5년이면 차세대 제품이 출현되어 적기에 시장에 출하하는 것이 경쟁의 관건이 된다. 우리는 세계최대의 기업들하고 경쟁해야하나 IBM은 지난해 645억불 매출에 65억불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했고, 반도체 전문회사인 Intel은 51억불 매출에 8억불 가까이 R&D에 투자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국가 전체적으로 50억불 가까운 연구개발비를 투자했으며, 업체별로는 가장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하는 반도체 3사를 합해서 2억불을 연구개발비로 사용하였다.

또한, 선진국 기업들은 투자리스크 경감과 신시장 선점을 위해 공동기술개발, 특허의 공동사용과 합작투자, OEM을 통한 상호구매 등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다. 예컨대, IBM과 애플 및 모토로라는 Power PC란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고, IBM, 지멘스 및 도시바와 NEC-AT&T, Texas Instrument-히타치는 256M DRAM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NEC와 AT & T는 주문형 반도체의 기술교류와 함께 OEM 판매 협력을 체결하는 등 그 예는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아직은 별로 줄 것이 없는 우리기업은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기업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연구개발비를 퍼붓고 있다. 미국은 국방성이 주관되어 Sematech를 구성하고 매년 연구개발비중 절반인 1억불씩을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으며, 유럽은 JESSI를 통해 연간 1.5억불 규모를 지원하고 있다.

싱가폴은 아예 정부가 반도체 업체인 Tech에 투자하여 DRAM 분야에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로 선진국은 기술개발 노력의 강화와 함께 개발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자업체는 약 2,000여건에 걸쳐 선진국기업과 기술제휴를 하고 있으나 89년 227건을 피크로 92년에는 180건으로 줄어드는 등 기술제공을 꺼리고 있다. 반면에 기술 도입료는 89년 8억 8,800만불에서 91년에는 11억 8,400만불로 증가하고 있다. (92년에는 일시적 현상으로 8억 5,100만불로 감소됨), 국내 컴퓨터업체는 OS특허, 반도체 특허료 등 10% 이상의 로열티와 특허료를 부담하여 수출경쟁력 약화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환경문제가 새로운 규제와 보호주의의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1972년 UN환경선언이 채택된 이래 선언적 의미에 머물러 왔던 지구환경문제는 80년대 중반 이후 범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구속력 있는 국

제환경협약으로 발전되고 있다. 특히 87년 9월 채택되어 89년 1월부터 발효된 몬트리올 의정서를 시작으로 92년 5월부터 발효된 바젤협약과 92년 6월 리우선언으로 통칭되는 유엔 환경개발회의(UNCED)를 거치면서 냉매·발포 및 세정제로 사용되어온 CFC와 할론의 생산·유통 및 소비가 1996년 부터는 전면 사용금지되어 국내 전자업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힘겨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같은 여건을 각종의 무역규제로 활용하고 있는데 미국은 1990년 대기정화법(Clean Air Act)을 제정·시행하고 있고, 금년 5월부터 CFC 관련 제품중 경고 라벨을 부착하지 않는 제품은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작년년부터 TV, 냉장고 등 주요 가전 제품에 대한 폐기물 예치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음규제 등 환경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CFC 대체물질을 사용한 가전제품을 개발하였고, 절전·저소음 제품인 그린화면 정보기기의 개발과 함께 전자공업진흥회 안에 환경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생산단계에서 폐자원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폐자원 회수 및 재활용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CFC대체 세정 기술개발과 대체냉매 냉장고 개발 등 기술 개발을 지원해 주고 있다.

넷째의 제약요인은 첨단산업으로서 갖는 기술의 급격한 변화와 기술예측의 어려움이다. 에디슨은 전기를 발명하기까지 5천번의 실패를 한 것이 아니라 5천가지의

전기가 안되는 방법을 찾았다고 자부하였듯이 첨단결과를 얻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첨단으로 가지 않는 길을 거쳐서 가게되나 우리의 경제·사회여건이 이를 수용해 주지 않음으로서 연구원이 겪는 좌절감과 강박관념은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또한, 선진기업간의 기술경쟁은 예측 가능성을 흐리게 하고 있다. 예컨대, 연간 51억불의 매출로서 세계 워드프로세서 시장의 33%를 공급하고 있는 Intel의 펜티엄 칩에 IBM, 모토로라 및 애플사는 Power PC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도전하고 있고, PC에 사용되는 OS의 대명사로 통하는 마이크로 소프트사는 Windows NT를 내놓으므로써 Unix와 일대 격전을 벌일 태세이다. 컴퓨터의 분류는 종래의 bit중심에서 MIPS로 바뀌어 왔으며 초대형, 대형, 중형, 소형, 초소형의 개념은 Notebook, Palmtop, Workstation과 Parallel Processor로 재편되고 있다. 브라운관에 도전하는 LCD와 PDP의 개발은 차세대 제품을 개발하는 중역들의 의사결정을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

끝으로 대내적 규제와 제약요인을 들수 있는데, 전자산업은 전체의 성장과 수출을 주도하고 있으나 내부적 경영측면으로는 아직도 허약한 체질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 의하면 매출액의 경상이익률은 제조업전체가 1990년의 2.32%에서 1992년에는 1.48%로 하향한데 비해 전자·전기업은 1990년의 1.83%에서 1992년에는 0.93%로

전산업에 비해 경영내실화가 미흡한 점을 알 수 있고 과세후의 지표인 매출액 순 이익률도 1992년 제조업전체의 0.85%에 비해 전자·전기업은 0.52%로서 전산업 평균의 60%밖에 벌지 못한다는 결과이다. 특히, 중소 전자·전기업의 1992년도 매출액 순 이익률은 -2.35%로서 1991년의 -0.32%에 이어 적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계산이다.

최근들어 환경예치금은 강화되었고 사적복제 보상금의 부과 움직임으로 격론을 벌인 바 있으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CFC부담금과 특소세 등 각종 부담금도 경영의 효율화와 국제경쟁력 향상이란 측면에서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 4. 전자·정보산업의 발전방향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명제는 앞서 설명한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하여 전자·전자산업이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지속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술개발 투자를 포함한 설비투자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다. 한국전자공업진흥회가 지난 5월 14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전자업계는 1993년중 지난해보다 53.4%가 증가한 3조 1,900억원의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연구개발투자도 지난해 보다 22.8%나 늘려잡고 있어 장래를 밝게 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新경제 5개년

계획』을 통해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설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외화증권 발행 규모확대('93:15억불→20억불) 및 국산기계구입 자금의 조기집행 등 설비금융의 원활화를 유도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10%)기간연장, 공장자동화기기의 핵심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50%)제도 신설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며 기업의 투자의식 고취를 위해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 지속추진, 주요업종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업 애로요인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자분야 등 첨단산업에서 기술개발의 특징은 선진국과 대기업의 투자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등 5개국은 세계전체 연구개발비의 82%를 투자하고 있으며, 이들 5개국은 세계전체 연구 인력의 69%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스위스 등 구라과내 5개국을 더하면 상위 10개국은 세계전체 연구개발비의 91%를 투자하고 인력의 84%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이 세계 전체 첨단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 수출의 37%, 일본 수출의 35%는 전자 등 첨단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상위 5개 전자업체의 연구개발비는 전산업 평균치 37%를 훨씬 웃도는 70%에 이르고 있고, 상위 20개사는 84%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특히, 부품산업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작년부터 Electro-21과제를 추진중이며, 상공자원부의

가용 연구개발비중 40%가 전자분야에 투자되고 있으나 내년에는 그 지원규모를 더욱 키우고 대상 품목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전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新경제』 원칙에 따라 연구개발도 공공 연구소나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연구소와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할 과제와 기업 단독 또는 기업체가 공동으로 할 과제를 분명히 하여 업계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HDTV, 차세대 반도체, CATV시스템 개발 등 대형과제에 추가하여 대형컴퓨터와 차세대 반도체로 각광받는 LCD, 멀티미디어 시대에 대비한 기기 및 영상압축 기술개발과 디지털형 VCR, 캠코더, 이동통신단말기, 자동차용 Navigator, 배전자동화시스템 등 중·장기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공동개발을 도모하고, 1~2년 안에 개발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시스템 기기의 개발도 적극화해 나갈 것이다.

상공자원부의 연구개발비중 이미 20.7%가 대학의 주관아래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박사급 인력중 77%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이 보다 능동적으로 산·학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될 것이다. 한편, 개발된 제품에 대한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초기부터 부품업체와 조립업체를 연계하고 기초기술과 Proto type 개발 및 양산화 단계까지 일관된 지원 행정체제 확립 노력도 강화될 것이다.

두번째의 노력은 금년중에 본격화된 행정규제완화 노력도 지속될

것이다.

정부는 금년도 역점 사업중의 하나로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지금까지 총 966건의 행정규제를 완화하였다. 이와함께 상공자원부는 지난 7월 『기업규제완화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규제완화위원회와 사무국을 두고 각종 규제요인을 발굴 시정하고 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의 사례로는 창업 및 공장설립의 절차 간소화 및 중소기업 전용공단 조성을 위한 특례조치, 법정고용 의무화와 관련하여 22개법에 의한 28개 분야의 고용의무 면제·축소·겸직 허용과 국제간 협약·안전위해·보건 등의 목적을 제외한 수출 검사제 폐지 및 수출승인, 무역업 등록제도 개선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세번째 과제는 전자분야를 포함한 전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미 공산품은 대부분 수입이 개방되어 있고 공산품의 평균 관세율은 6.2%로서 OECD국가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서비스 및 유통업을 포함한 여타 분야도 단계별로 자유화 되어 97년에는 외국인 투자 자유화율이 93.4%에 이르게 될 것이다.

전자·전기 분야에서는 금년 9월말 현재 611건 14억 3,500만불의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 졌으나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한 절차간소화와 토지취득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는 외에 첨단산업에 대한 외국인 전용공단(Free Investment Zone)설치도 적극 추진중에 있다. 이밖에 기술도입 신고제

폐지 범위를 확대하고 처리기간의 단축 등 절차 간소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외국인의 국내투자 못지않게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도 적극 지원될 것이다. 이미 전자분야에서는 196건의 해외 투자가 이루어져 왔고 최근들어 불란서, 영국 등 선진국의 투자유치 정책과 NAFTA결성에 힘입어 해외투자는 더욱 활발해 질 것이다. 특히, 대 중국 투자가 매우 활발해짐에 따라 내년초에는 민·관 합동으로 대중국 전자분야 투자여건 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우리기업의 해외 투자를 지원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UR에서는 전자분야에서 광범위한 무세화 내지 관세인하 협상이 진행중이며 우리나라도 세계 10위권 무역국이란 위상에 맞추어 적극 참여하고 있다. 정부조달 분야에서도 확장 협상에 참여하여 우리의 구매시장 개방과 선진국의 조달 시장개방을 함께 논의하고 있고, NAFTA와 EC 통합에 따른 대책도 업계와 협의를 강화하여 마련해 나갈 것이다.

네번째 과제는 선진국과 산업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지난 4월 미국 실리콘벨리에서 한·미 양국의 컴퓨터 및 반도체업체의 협의회와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시작된 한·미간 산업기술협력은 한·일, 한·불, 한·중, 한·호주, 한·영 등 주요국가에 이어지고 있다. 교역규모가 커짐에 따라 지금까지 반덤핑과 상계관세 제소 등이 이어져 왔으나 이를 협력관계로 승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정부간, 단체는 단체간 대화를 통해 기술제휴, 합작투자,

제품의 공동개발과 신시장 개척 등 산업협력사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전자공업진흥회는 미국 전자진흥회(EIA)와 연례회의를 추진하는 외에 12월 초에는 구라파 전자진흥회(EACEM) 회원사가 방한하여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반도체협회는 미국 반도체협회(SAI) 및 반도체장비협회(SEMI)와 연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내년 6월에는 서울에서 양국 업계간 협의를 계획하고 있고 일본의 전자진흥회(EIAJ)와도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KOTRA와 산업기술정보원은 지난 10월 미국의 첨단기술 보유업체를 초청하여 한국업체에 이전을 유도하는 제1회 기술시장(Techno Mart)을 개최한 바 있으며, 내년에도 이같은 노력은 강화될 것이다. 또한 KOTRA는 미국 상무부내 해외통상서비스(Foreign Commercial Service)와 업무협약을 통한 교류를 강화하고 있고, 산업기술정보원은 미국 상무성 기술정보국(NTIS), 소련 등 11개국 16개 기관과 정보교환 협약을 통해 국내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끝으로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1946년 최초의 범용 컴퓨터인 "ENIAC"이 발명된 이래, 컴퓨터 산업이 이룩한 기술혁신과 응용범위의 확산은 오늘날 정보화혁명의 기반을 이루고 있고 각국은 앞다투어 정보산업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클린턴 미 행정부는 지난 50년대의 기간 고속도로 건설에 필적

하는 "Information Super Highway" 구상을 추진하고 있고, EC의 경우에도 범유럽차원의 첨단 정보통신 기술개발과 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RACE"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웃 일본도 지난 2월 "신사회자본" 부문 경기대책 일환으로 정보화 투자를 강화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를 "IT 2000 Plan"을 통해 싱가포르를 국제 정보망의 핵심축인 Information Island로 만든다는 의욕에 찬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新경제 5개년 계획』을 통해 국가사회의 정보화 및 정보산업육성 전략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여 강조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보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는 크게 확대될 것이다.

우선 기기분야에서는 Notebook, Palmtop 등 초소형 기기와 중형 및 Workstation 컴퓨터가 연구소와 업계의 협력에 의해 개발될 것이며, 대형컴퓨터 분야는 선진국 기업과 협력을 통해 국산화가 추진될 것이다. 통신기기 분야에서는 차세대 교환 시스템(ATM), 디지털이동통신 단말기, ISDN용 단말기 등이 관계부처와 협력에 의해 개발될 것이며, 핵심부품과 주변기기도 "Electro-21" 등 부품국산화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개발될 것이다.

컴퓨터를 기점으로 하여 통신과 가전제품, 방송업, 출판 및 신문, 잡지 등이 융합되어 응용되는 멀티미디어 산업이 본격화 됨에 따라 멀티미디어 PC, CD-I 등 관련기기 개발을 추진중에 있고, 내년중엔 영상압축기술과 PDA 등

의 개발을 업계와 공동으로 추진할 것이다.

정보처리산업분야는 제조업차원의 지원시책이 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으나 『新경제 5개년 계획』은 소프트웨어, 부가가치 통신산업, Data Base 산업 등 정보처리업에 대해 제조업에 준하는 세제·금융상 지원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함께 소프트웨어 유통 활성화를 위한 Publisher의 육성, 소프트웨어 개발의 외주 확대, 구매제도개선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될 것이다. 소프트웨어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용인단지도 그동안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다.

정보화 분야에서는 이미 무역자동화(EDI)가 한국무역자동화(주) (KT-NET)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어 1996년까지는 통관, 하역, 금융망의 전산화가 가동될 예정이며, 유통분야의 정보화를 촉진하는 자동인식산업도 급신장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위해서 지난 7월 『중소기업 정보화추진본부』가 설치되었으며, 철강·자동차·전자 등 주요 업종별로 단체와 업계 및 관련연

구소를 연결하는 업종별 정보화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정보유통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과 정보산업의 표준화를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될 것이다.

## 6. 전자·정보산업의 장래

『新경제 5개년 계획』이 본격화된 금년부터 금세기 말까지는 정보화는 성큼 생활화 될 것이고 전자산업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발전을 거듭할 것이다.

우선 '95년초에는 CATV 방송이 처음 개시되어 우리의 생활패턴을 바꾸게 될 것이고, '95년중 통신·방송 복합위성의 발사와 '96년 아틀란타 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될 HDTV는 경제적인 측면은 물론 사회·문화 전체적으로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

가전기기는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Analog 방식이 전면 Digital 화 될 것이며 이에 따른 기술개발은 더욱 격화될 것이다.

이제 국제화의 불은 당겨졌으나 제도의 국제화 못지않게 행동의 국제화와 의식의 국제화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 경영조직도 이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종전문화도 여기에 목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자산업내에서도 IBM과 같이 컴퓨터와 반도체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제패하던 거함은 최근들어 고용인원을 크게 감축했다고 한다. 반면, 반도체만 업으로 하는 Intel은 작년도 매출이 51억불에서 금년에는 72억불이 넘어서는 의미를 새겨야 할 것이다.

일본의 몇몇 기업은 일본을 세계적인 전자산업국으로 만들어 놓았고 독일이나 화란의 수개 기업은 이들 국가들을 첨단산업국으로 이미지를 바꾸어 놓았다.

지금 업계 스스로에서 일고 있는 질 경영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와 생산기술 향상과 연계 될때 우리의 장래는 매우 밝다고 생각한다.

이미 전자산업은 우리수출의 1/3을 담당하고 있고, 설비투자 와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있으나 『新경제 5개년 계획』의 제2차 년도를 다지며 앞으로의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면서 5개년 계획이 마무리 되는 1997년 1,363억불 수출과 1인당 GNP 1만 4,000불 실현에 초석이 될 것으로 믿는다.

